



# 안전기준 스스로 지키는 기업이 성공하는 여건 조성

- 산자부,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산업자원부  
조기성 부장

지난 7월 1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강당에서 30여 기업에서 오신 분들과 30명의 안전지킴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품안전 자율이행협약"을 체결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전기제품 및 공산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접관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와 사업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큰 행사였다.

## 안전관리 패러다임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안전관리제도는 ▲정부는 안전관리대상품목 및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로 이뤄진 "안전지킴이단"이 전기제품, 생활용품, 어린이용 제품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도록 한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그동안 계속해온 정부위주의 단속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1967년에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1974년에 「전

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직접 안전관리를 하여 왔으나 안전위해 사고는 지속되어 왔다.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제품의 32%, 공산품의 20%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었으며, 공산품의 경우 안전위해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34%나 늘어났다. 최근에는 동남아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저급제품을 한탕주의식으로 수입하여 시장에 유통시킨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웰빙 등으로 다양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서 생활은 보다 편리해지는 대신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기 압력밥솥 등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단속 공무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제 기업, 소비자, 정부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는 자율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시장진입이 차단되고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또한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도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증이나 허가절차 없이 시장에 출시하면 사후적으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자율안전확인(SDoC)"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제도는 시장모니터링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 올 하반기 '제품안전정보망' 가동...불량제품 시장 진입 사전 차단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과 이에 맞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이러한 환경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전기제품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지금까지 국제기준과 안전기준을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다보니 국제기준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웰빙 등으로 인한 다양한 기능의 전기제품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기

준을 대폭 정비중에 있다.

▲또한, 금년 중점 안전관리 대상전기제품으로 냉·온수기, 형광등기구, 발욕조 등 27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소비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최소한 중점 안전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안전지킴이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기제품, 생활용품, 어린이용 제품 등 3개 분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제품의 경우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내에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제품안전자율이행(VAS) 마크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킬 것을 신청한 기업(제품안전 자율이행협약 신청기업)의 제품에는 기업이「제품안전자율이행(VAS)」마크( )를 부착할 수 있으며, 자율안전이행을 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정기검사 일부 또는 전부면제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안전지킴이단이 시장모니터링을 할 경우 필요한 정보제공 등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제품안전 정보를 수집·관리하는「제품안전정보망」을 금년 하반기에 가동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기업이 성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